□ 보고회 진행순서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5	5	·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김택성의원
14:05	14:10	5	· 인사말씀 - 김호서 의장	
14:10	14:30	20	· 북유럽 해외연수 결과 종합보고 -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	
14:30	15:00	30	· 주제별 선진사례 발표 - 환경복지위원	
15:00	16:00	60	· 자유토론 (의원 및 보고회 참석자)	
16:00			· 폐 회	

□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 사	김택성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고영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문면호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유창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임동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이현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정진숙	

목 차

Ⅰ. 보편복지의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다 ····· 3

Ⅱ. 주제별 선진사례 발표

1.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한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 57

2. 핀란드의 글로벌 경쟁력은 교육에서 온다. ····· 65

3. 우리도 무상의료 가능하다! 완전고용을 꿈꾸다! ····· 73

4.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한다. ····· 93

5.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국가의 친환경 정책 모델 ····· 105

※ 별 첨 ····· 113

1. 연 수 개 요 ····· 115

2. 연수국 일반현황 ····· 118

종합보고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보편복지의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다!

환경복지위원회
김 성 주 위원장

보편복지의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다

- 북유럽연수보고서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1

연수목적

-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 사회양극화
  - 지역 불균형
  - 저출산고령화
  - 청년실업
- 보편복지논쟁에 대한 이해
  - 무상급식논쟁
  - 너희가 보편복지를 아느냐
    - 철학적 이해 없이 정쟁으로 변질 : 찬성과 반대
    - 복지=복지병?
    - 복지=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
      - 질병, 실업, 노후, 교육, 주거 등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사회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가

2

연수목적 (2)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민
  - 4대강사업을 대표적 녹색성장사례로 홍보하는 정부
  - 기후변화대응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안
-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버스파업
  - 대형마트
  - LH문제
  - 사회적 대타협
-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3

연수대상

- 왜 북유럽인가
  - 노르딕모델
    -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복지를 실현한 나라들
  - 지속가능발전 선진국
    - 기후변화대응
    - 신재생에너지분야
  - 민주주의
    - 민주주의 선진국 : 민주주의 지수
    - 연대 : 평등사회. 조건없는 대외원조
  - 공공디자인
    - 노르딕디자인
    - 소박 : 명품가게 없는 나라
    - 실용주의
    - 사람중심

4

연수대상 (2)

-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민주주의
  - 보편복지
  - 도시계획

5

연수프로그램기획

- 대상지 선정
  - 핀란드
  - 스웨덴
  - 덴마크
- 주제 선정
  - 복지
  - 환경
  - 노동/고용
  - 도시 :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 '빡쎈 연수'
  -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
  -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원순변호사) 부설 '여행사 공공'에 의뢰
  - LH사태로 5월 연수계획 취소 위약금 납부
  - 애초 계획했던 기관방문을 거부당하는 어려움

6

일정별 방문지 6.22-7.2

- 핀란드 2일
  - 안난딸로아트센터
  - 케이블팩토리
  - 헬싱키시청사/시의회
  - 헬싱키 도시계획전시관
  - 헬싱키 공공도서관
  - 아라비안란따
- 스웨덴 4일
  - 후딩에 코뮨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
  - 스톡홀름시청사/시의회
  - 감라스탄 구 시가지
  - 함마르비 수변도시
  - 웁살라대학
  - 나까노인전문병원 (Nacka Geriatriken AB)

7

일정별 보고6.22-7.2 (2)

- 덴마크 2일
  - 코펜하겐시청사
  - 코펜하겐 중앙역 자전거 대여소
  - 스트뢰이어트(차없는 거리, 보행자천국)
  - 로스킬레(Roskide) 고용센터(Job center)
  - 노인복지시설 AEIDER Hjem
  - 덴마크디자인센터

8

주제별 보고

9

복지

- 공짜의 나라 vs 세금 많은 나라

10

노르딕 모델

- 노르딕 3국의 공통점
  - GDP 대비 높은 공공·사회분야 지출 규모
  - 공평한 소득
-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 노후에 많은 연금 수혜
- 장애인은 완벽하게 보호받는다
- 누구나 아프면 비용 걱정없이 병원에 간다
  - 1년 진료비와 약제비 상한액 설정
  - 입원, 수술 관계없이 본임부담액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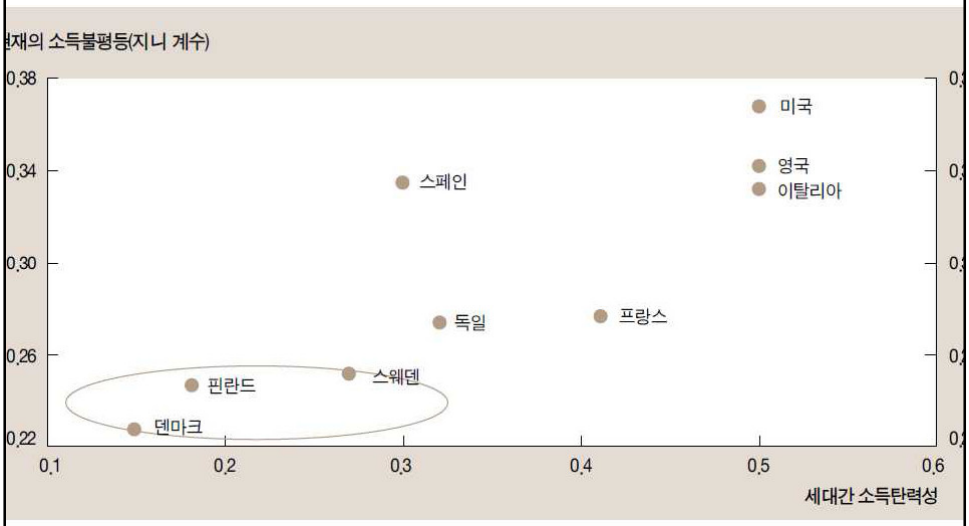
11

유럽 국가들의 공공. 사회분야 지출 비교

	GDP대비 조세부담 ('06)	GDP대비 총지출 ('06)	GDP대비 사회분야지출 ('03)	GDP대비 아동보호 및 조기교육 ('03)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
덴마크	49.0	51.1	23.8	1.6	78	83.6
스웨덴	50.1	55.5	29.2	1.3	73	63.7
핀란드	43.5	48.5	22.7	1.4	73	63.4
독일	35.7	45.6	29.5	0.4	73	39.9
프랑스	44.5	53.7	29.8	1.2	62	51.2
네덜란드	39.5	46.7	20.6	0.5	73	81.7
스페인	36.7	38.5	19.6	0.5	50	81.2
영국	37.4	45.1	22.8	0.6	63	34.4

12

소득불평등도



13

노르딕 모델(2)

- 높은 각종 연금과 수당, 보조금
- 사민주의 정당의 장기집권
  - 처음부터 이런 복지시스템이 도입된 게 아니다
  - 사민당 집권이 계속되는 동안 차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해 온 것
  -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전환
  - 부작용 : 관료주의, 도덕적 해이
  - 우파의 집권기에는 조정도 이루어짐

15

노인복지

16

노인문제

- 소득보장
  - 연금
- 건강
  - 의료서비스
- 주거
  - 노인주택

17

스웨덴

- 세계3위 초고령사회
- 2008년 현재 전체인구의 18%가 노인
- 누가 노인을 책임질 것인가
- 교회와 가족에서 ->지방정부로 전환

18

연금의 역사

19

연금제도 도입

- 1913년 노령연금제도 도입
  - 67세 이상 또는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
  - 구빈법과 구별되는 최초의 보편복지제도
  - 지급대상의 한계
    - 소득연금을 받는 층은 전체 노인의 30%에 불과 나머지 70%는 결국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음

20

보편적 연금제도의 발전

21

연금의 종류

- 기초연금
  - 1935년 기초연금법 제정
  - 소득 및 납세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
  - 연금지급액
    - 1930년대 노동자임금 9%수준 지급
    - 1950년대 최종임금의 50-70% 수준
- 부가연금(ATP)
  - 고용기간과 소득에 비례한 연금
  - 1959년 도입
  - 가장 소득이 높은 15년간 임금을 표준으로 계산
  - 연금납무 의무화해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 : 도입 당시 논란 많음
- 보충연금 도입(1969년)
  - 소액수령자나 연금 비수혜자 대상
- 기타 장애연금, 주택수당, 유족연금 등

22

연금제도의 개혁

- 개혁배경
  - 노인인구 급증
  - 연기금 고갈에 대응
  - 1990년대초 경제 위기
  - 1992년 보수연립정부 등장
- 개혁내용
  - 보장연금
    - 기초연금 대체
    - 매년 소득검증을 통해 지급
    - 미혼 독신자 월 7,144크로나(2004년, 약140만원)
  - 소득연금(ATP)
    -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18.5%
    - 16%는 소득연금이고 2.5%는 프리미엄연금으로 주식에 투자
  - 프리미엄연금
    - 소득의 2.5%를 가입자가 선택한 주식에 투자
    -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주식매도해 연금으로 지불
    - 투자한 주식에 따라 이익 손해 발생
    - 적립형주식저축 형태의 사보험 성격

23

연금제도의 개혁 (2)

- 1992년
  - 소득연금/보조연금
    - 122만명 수령
  - 기초연금
    - 150만명 수령
  - 평균 수령액
    - 10만8천크로나(183만원)
- 2000년
  - 소득연금/보조연금
  - 프리미엄연금(주식형연금)
  - 보장연금

24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 양로원
- 노인아파트
  - 1939년 도입
- 서비스홈
- 노인요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의 장기병동
- 재가서비스
  - 1950년대 도입

25

스웨덴 나까노인전문병원

26

방문의료팀 인터뷰

- 한국인 간호사 김문정 33년 거주
- 재활치료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우리와 달리 특이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 병원에 오지 않고도 자기 집에서 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장기 입원에 따른 피로감 피할 수 있고 코뮨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 방문 간호
    - 병원에 등록된 노인대상
    - 청소, 의례적 치료,약 배달
    - 영양치료(링게르)
    - 항생제 주사투여
    - 보통 40-50km떨어진 곳 방문, 먼 경우 250km까지 방문하기도
  - 24시간 서비스
    - 근무간호사 25명
    - 밤팀 6명 : 주 2회 근무
  - 82년 시작
- 한국은 가정방문간호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환자개인부담이라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

27

방문의료팀 인터뷰 (2)

- 서비스 제공 사례
  - 환자가 집에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여기 와서 재활치료
  - 치료 후 집으로 갈지 요양원으로 자기가 결정
    - 나까노인병원은 중간단계
  - 평균입원일 9일
    - 집과 시설 중 선택
    - 집에 가기 원할 경우 코뮨에서 문턱, 욕실, 화장실 등 집 개조 지원
    - 미리 시장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28

방문의료팀 인터뷰 (3)

- 감기가 걸릴 경우
  - 1주일 집에서 쉰다
  - 감기약 처방은 없다
  - 발열여부 확인하고 열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타 환자 감염우려때문
  - 진통제 등 먹고 쉬라고 한다
  - 만약 한국에서 감기 걸렸다고 1주일 쉰다고 하면 무사할 직장이 있을까
- 의료서비스만족도는?
  - 환자1인당 상담시간 30분
    - 대기시간 길어
      - 돈있는 사람은 개인병원 가기도 한다
  -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괜찮아
  - 김문정씨 경험
    - 오빠 암으로 입원
    - 간호사로서 기대에 못미쳐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금방 온다고 하고 시간이 걸려-자기가 직접 해버려
    - 그런 경우 빼고는 만족

29

덴마크 노인복지시설
Herlev elder center(Lærkegaard Center)

- 1996년 설립
- 생활인 62명
- 근무자 80명
- 위탁운영
- 장기요양/재가서비스/재활센터/주간센터/노인정신질환
- 3개 housing group
  - 커플 하우징 2개
  - 노인정신질환 하우징 1개
- 16개 임시주택
- 모든 시설은 단층 배치-방에서 바로 정원에 나갈 수 있도록

34

덴마크 노인복지시설
Herlev elder center(Lærkegaard Center) (2)

- 카페, 식당, 재활운동시설
- 이용료
  - 재산에 따라 차등
    - 자기가 살던 아파트값에 따라
    - 24시간 care : 1일 22크로나
- 시설 생활인 인터뷰
  - 전직 선원, 교사
  - 왜 집에서 시설로 왔는가
    - 현재 71세. 56세 때 사고
    -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본인도 불편하고 여기서 잘해주니까 여기가 좋다
    - 가족들은 자주 찾아와서 만난다
    - 월 7500크로나 지불
    - 연금수령액+장애수당 15000크로나 이상
    - 소득의 50-60% 세금납부-고소득자
    - 지금 누리는 혜택을 보면 세금을 더 내도 좋다고 생각
  - 젊었을 때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
  - 60년대부터 복지시스템 정착 :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
  - 내 얘기만 듣지 많고 내가 키우는 꽃도 보고 가라고 권유

35

보건의료

37

스웨덴

38

보건의료제도

- 광역지방정부(란드스팅)담당
- 기초자치단체(코뮨) -노인의료서비스 담당
- 1955년 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 보편의료 도입

39

1982년 보건의료법

- 전체 국민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
- 80년대말 재정 어려움 직면
- 민간의료 및 경쟁 도입

40

문제점

- 관료화에 다른 대기시간 증가
- 구역제한에 따른 환자선택권 제약

41

1992년 에델개혁

- 이전-노인은 장기병동에서 여생을 보냄
- 이후-자택생활지원:청소, 빨래, 식사보조 등 사회서비스 제공.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통합운영
- 개혁배경
  - 늘어나는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대응
    - 노인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소비한 병원비용=일반환자의 3배
  - 개혁의 방향
    - 노인보건의료사업 란드스팅에서 코뮨으로 이관
    - 탈시설화 추구 : 인본주의 바탕
  - 개혁의 내용
    - 개인중심 종합프로그램 방식 : 재가서비스 개인화
    - 데이케이센터운영
      - 식사, 가벼운 진료&치료, 문화활동 제공
      - 작은공동체가족 방식도 도입
  - 개혁의 효과 : 사망 1년전 입원기간 절반 수준 단축
  - 보편주의와 인본주의 원칙 고수
  - 민간위탁 전환
    - 사회적기업 참여 : 삼할
    - 전체 10%
    - 평가 : 타 국가들의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는 달리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지원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42

의료전달체계

- 1차 진료소 - 홈닥터시스템(주치의제도)운영.
-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팀 운영 90년대 이후 민영화- 란드스팅과 위탁 또는 계약형태 운영
- 2차 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전국 70개 대학종합병원 8개
- 란드스팅의 역할
- 시민건강과 진료계획서 작성 - 각 병원 및 진료소와 구매계약 체결 매년 성과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1990년대 이후 의료제도개혁의 핵심 의료서비스공급자간의 경쟁 유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목적
- 국가진료보장제도 도입 0-7-90-90규칙
- 1차 의료접근은 즉시
- 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7일이내
- 전문의 상담은 90일 이내
- 진단 후 치료는 90일이내 실시할 것을 정부가 보장

43

의료비 지불

- 진료소 방문시 100-150크로나
- 입원 1일 80크로나 이하, 치료비 별도 없음
- 총액상한제 - 진료비 입원비 연간 900크로나, 약값 1800크로나 총 2700크로나(45만원) 넘지 못함:수술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

44

의료재정

- 보건의료제도 운영 총비용 GDP 9%
- 란드스팅 세입 71% 중앙정부 보조금 16% 기타 10%

45

장애인정책

- "모든 것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 2000년 "환자에서 시민으로" 국가행동계획 발표
-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회구조 및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
  - 장애인 개인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집중
- 장애수당
  -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년 15,000크로나~29,000크로나
  - 19세-65세
- 활동보조원 보조금
  - 시간당 252크로나

50

장애인정책 (2)

- 장애아동돌봄수당
  - 월 8,542크로나('2008)
  - 갓난아기부터 19세까지
- 한국의 장애수당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 대상 월3만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중증, 경증), 소득수준에 따라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까지 지급
  - 장애인연금
    -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9만원(감액적용 없을 시)에서 월15만원까지 지급

51

주택정책

- 임대주택
- 사회통합
  - 아라비안란타
    - 학생주택
    - 노인주택
    - 장애인주택
    - 일반주택
  -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공존 5:5

53

아동보육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 출산유급휴가 18개월(스웨덴)
- 아동수당(출생부터 16세까지)
  - 1050크로나(스웨덴)
- 한국
  - 소득기준(4인가족기준 월480만원)70%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차상위가구 이하) : 10-20만원 차등

54

교육과 문화예술

55

헬싱키의 도서관

- OECD국가 중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1위 - 핀란드
- 50개의 공공도서관
- 헬싱키 시민 매년 평균 11.1 번 방문 평균 15.6책 대여 (도서관연례보고서 2010)
- Rikhardinkatu Library
  - 1811년 설립
  - 시내 제일 오래 된 도서관
  - 방마다 사서 배치. 방문예약 상담 가능
- 아라비안란타 도서관
  - 2004년 설립
  - 건물과 건물 사이 빈공간 활용
- 완벽한 상호대차시스템
  -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리고 가까운 곳에 반납
  - 반납한 책은 매일 새벽 4시 차량으로 원래 도서관에 갖다줌
- 정책 대안
  - 중규모 도서관 건립
  -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58

안난딸로예술센터

- 헬싱키 문화국 소속
- 안내자
  - KatariinaMetsälampi, producer in Annantalo expert in international networks for performing arts for children
- 헬싱키 아동 청소년에게 문화와예술 창작 및 체험 수단과 기회 제공
- 매년 5만-8만명 방문
- 55명의 아티스트와 교사들에 의해 지도
- 13명 정규직 근무
- 5*2코스
  - 5주동안 매주 2시간 예술교육 지도
  -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최소한 1번이상 예술과정 이수토록 목표수립
    - The goal is for each and every primary school student in Helsinki to participate in 5x2 art courses at least once.

59

안난딸로예술센터 (2)

- Annantalo의 아트 코스는 애니메이션, 건축, 그래픽, 도자기, 시각 예술, 음악 베이비 클럽, word art, 만화, 섬유 예술, 무용, 연극, 인형극, 사진 및 비디오를 포함합니다. 모두 80 코스 제공
- 헬싱키에 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준다는 것
- 교육철학
  - 교사의 역할
    - teaching->encourageing
    - for->with
- 방문 스케치
  - 방학 중이라 아이들이 없다
  - 입구에는 아이들의 활동사진이 벽에 전시되어 있다
  - 아이들의 작품
  - 다양한 공간들
    - 연극
    - 만화창작
    - 작곡
    - 그림그리기
    - 만들기
    - 방송실
    - 방송스튜디오

60

안난딸로예술센터 (3)

- 정책대안
  - 전주시도 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가 있음. 문광부 지원. 직원 3명?, 예산만 갖고 일부 학교 신청받아서 지원
  - 방과후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부럽다
  - 우리는 항상 몇 명, 몇 학교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 교육에서도 보편성 원칙이 적용되어야-선별성과 보편성이 부딪힌다

61

케이블팩토리

- 노키아 옛 공장을 종합문화예술센터로
- 핀란드 최대 문화센터
- www.kaapelitehdas.fi
- 250여 아티스트, 밴드, 학교, 극장, 단체, 기업 입주
- 3개의 박물관, 13개의 갤러리, 댄스 극장, 아틀리에, 미술 학교, 리허설 스튜디오, 라디오 방송국, 유명한 식당 등의 부대시설
- 관리 - 헬싱키에서 설립한 관리회사
- 임대 형식
  - 1평방미터 월 9유로(평당 5만원)-시중보다 저렴
- 인기가 좋아 입주하려면 기다려야

62

세금문제

- 평균 50% 내외
  - 코뮨19% 란드스팅 10% 나머지는 국가에 납부
  - 소득에 따라 최대 60%까지 납부
- 고소득층에게는 누진세 적용
-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 내가 낸 만큼 혜택을 받으니 좋아
  - 덴마크노인시설에서 만난 두 다리 절단 장애인
- 우리나라 보험제도
  - 민간보험이 사회보험 압도. 세계 4위
  - 생명보험, 상해보험, 교육보험
  - 보험료 다 합치면 무상의료 실현 가능할 것
  - 사례
    - 생명보험 1개, 상해보험 2개 합30만원 정도 납부
    - 사망 또는 사고, 질병에 대비하는 것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 보다 사보험 납부액이 더 많지만 보장은 약함

63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도시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의 도시는 어떨까
국민의 집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 국민의 집으로 진화

65

헬싱키 vs 스톡홀름 vs 코펜하겐

66

헬싱키

- 가장 절제된 소박한 도시
- 헬싱키 도시계획국 "헬싱키에서 유일한 건설은 트램 노선을 새로 까는 것"
  - 헬싱키는 모든 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이고 민주주의로 본다
  - 단 2개의 색깔만 사용
    - 녹색과 회색
      - 가장 자연과 가까운 색
      - 튀는 색은 사람에게 거부감을 준다
- “지루하지 않다”
- 헬싱키 2011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 선정

67

스톡홀름

- 헬싱키에 비하면 문명화된 번잡한 그러나 철저히 계획된 도시
- 구시가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 여러 섬을 연결하는 운하와 바다와 다리가 잘 어울리는 도시
- 3-5층짜리 저층건물과 고층빌딩이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

68

코펜하겐

- 앞의 두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발랄하고 활기찬도시
- 첨단 디자인을 뽐내는 건물이 치솟고 화려한 색상이 도시를 물들인다
- 분홍색으로 칠해진 건물
- 약간 과장하면 '코베갈것' 같은 도시

69

대중교통발달

71

왜 대중교통인가

-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 : 많은 사람 동시 이동 가능
- 교통정체에 따른 비용발생 회피
- 기후변화대응 필요성 : 석유자원에의 의존 탈피

72

트램

- 거미줄 같은 연결
- 헬싱키
  - 3분 단위 운행
- 스톡홀름

73

지하철

- 코펜하겐
  - 트램 없음
  - 지하철(무인) 및 S-tog(근교열차)
    - 자전거와 유모차 칸 별도
    - 요금 20DKK(4000원)
    - 1시간내 무료환승
    - 무임승차 단속원

74

자전거

75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

- 자전거는 왕이다
  - 차량의 크랙션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자전거 따르릉 소리는 들린다. 비껴달라 위험하다
  - 인도와 자전거 도로 구분
- 사람은 더 왕이다

77

자전거 전용도로

- 헬싱키는 자전거보다는 트램이 편리한 도시
- 스톡홀름은 자전거와 트램 어느 것을 이용해도 좋은 도시
- 코펜하겐은 트램은 없고 대신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편리할 수도 있는 도시
-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신호등
- 역시 최고의 자전거도시는 코펜하겐
- 서울의 자전거교통분담율은 2%
- 코펜하겐 자전거교통분담율 33%
- 자전거도로 연장 400km(독일전체 자전거 도로와 맞먹어. 전체 시면적 88제곱km)
- 자전거도로 넓이2.2m->3.5m로 넓히는 공사 중

78

코펜하겐에서의 자전거 체험

- 코펜하겐 중앙역 근처 자전거보관소
- 간단한 신분확인과 양식작성으로 대여 가능
- 장관도 시장도 자전거로 출퇴근
- 시민의 1/3이 자전거로 출퇴근
- 자전거통근율을 50%로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
- 수레달고 다니는 자전거
  - 유모차 또는 짐칸

79

자전거 정책

- '그린 웨이브'신호정책
  - 자전거속도 시속 20km에 맞춰 신호 구성. 녹색신호를 한 번 받으면 정차없이 연속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 '시티 바이크(City Bike)'프로그램
  - 누구나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고 가까운 보관소에 반납
- 자동차억제정책
  - 차량등록세 180%부과(차값보다 세금이 비싸)
  - 비싼 주차료
  - 도심통행세

80

덴마크의 친환경정책

- 1971년 세계 최초 환경부 설치
- 친환경활동은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발달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 풍력발전 베스타스
    - 2015년이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비슷해져
    - 바람이라는 원료는 무료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렴
    - 풍력발전 비중 20% 2020년까지 42%로 늘릴 계획
    - 자연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급조절 어렵다는 것-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거나 부족할 때 다른 에너지원으로 보충하는 기술이 필요 다시 말하면 통합전력기술인 스마트그리드 전략이 필요
  - 코펜하겐 스마트 자전거
  - 1985년 덴마크 의회는 원자력의 영구 폐쇄에 합의

82

덴마크의 친환경정책 (2)

-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의 완전 독립' 선언
- 한국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발전량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1.07%(2009년 기준)
  - 2030년까지 원전 추가 건설
  - 재생에너지비율 2030년 10% 목표
- 독일 메르켈총리 정부
  - 2022년까지 원자력 완전 폐쇄 선언
  - 2050년까지 화석연료 독립. 모든 전력 재생에너지로 생산 목표
  - 원전 연장을 결정했다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 대전환
  -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 2020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
  - 현재 전체 전력 중 17% 재생에너지로 생산. 원자력 비중 23%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는 또 다시 대기업들의 먹이감 놀이터가 될 것.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고용증대에 별 기회도 되지 않을 것

83

도시의 안전과 사람 중심

- 보행자위주 신호등
  - 길을 가로질러 우람하게 자리잡은 자동차신호등이 없다
  - 보행자 눈높이에 같은 크기 설치
  - 큰 도로에는 신호등을 조금 높이 설치
  - 연구조사에 의하면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믿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등이 바뀔 시점에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 과속을 하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 지금 일부 도시에서는 신호등을 아예 없애는 실험을 하고 있다. 신호등은 교통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므로 없애고 대신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도시의 성공 사례 보고
- 보행로
- 차 없는 거리 : 코펜하겐 스트뢰이어트
- 회전교차로

85

전라북도 친환경정책에 대한 제언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라
-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
- 화석연료의존으로부터 탈피
- 과감한 투자
- 자전거정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86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87

아라비안란따

- 시내에서 6km떨어진 해안가
- '아라비아 해안'의 뜻
- 헬싱키 최초의 공장이 들어섰던 곳
  - 1873년 설립
  - 그릇 도자기 생산
- 도자기산업 쇠퇴
- 옛 도자기공장의 변신
- 옛 항구와 공장을 대학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

88

아라비안란따 (2)

- "살아있는 실험실"
- "old & new", "자연과 도시", "산업과 주거" "학습과 평화", "예술과 기술" 등의 조화로운 사례
- 주거와 직장과 학교의 공존
- 헬싱키 아트&디자인대학 등 입주
- 기업
  - 핀란드 최대 도자기 회사 이딸라
- 주거단지

90

아라비안란따 특징

- 도시재생사례
  - 10년에 걸쳐 추진. 아직도 진행 중
  - 쇠락한 해안 공장지대에 공장이 떠난 이후 대신 대학이 들어오고 차례로 주거단지를 조성해가는 사업
- 다양성과 공존
  -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
  - 해변에 있는 집도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낮게 짓고 다음 건물은 내어서 짓는다. 테라스를 노출시켜 거실에서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 디자인만 다양한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일반이 공존
    - 학생들, 은퇴한 노인들, 장애인들, 직장인들이 섞여 산다
  - 전주의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인 밀집지구로 조성한 지역이 그 후 들어서 다른 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적
- 'Living Lab'
  - Arabianranta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요구 및 경험들을 이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기업들에게서 발생하는 연구, 제품, 그리고 서비스 혁신 및 개발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

93

아라비안란따 특징 (2)

- 공공성
  - 시에 의한 주도
    - 40% 임대주택
    - 민간업체 개발-개발자가 건설품질의 향상없이 아파트의 가격을 올릴 수 없다
    - Art & Design City Helsinki Ltd.
- IT기술 접목
  - 주거단지 전체에 광통신망 개설
  - 가상마을 구축

94

핀란드 도시계획

- 100년의 장기계획 20-30년의 중기계획
-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 새로운 도시구역을 만들 때나 대중교통체계를 발전시킬 때 환경요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
- 마스터 플랜 재정비 기간 30년
- “시내 중심에서 새 빌딩을 짓거나 공사가 이루어 지는 일은 없다”
- “단지 항구도시로서 도심을 벗어난 항구 주변의 쇠퇴한 기능을 보완하고, 쓸모없어진 낡은 하역장 건물이 있던 자리에 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과 문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미래도시계획의 주 내용이다”(이애경, 핀란드디자인산책)
- 헬싱키 '거대한 공원 위에 세워진 도시'
  - 도시계획국 공무원 270명 그 중 건축사 90명 엔지니어 40명
  - 뉴욕 : 인구 800만명 280명 / 워싱턴 80명

95

함마르비

- 스웨덴 스톡홀름
- 올림픽선수촌 계획을 친환경주거단지로
- 심비오 시티(Symbio City)
  – 에너지, 물과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종합관리
- 수변도시모델

97

8하우스

- 덴마크 코펜하겐

98

Cable Factory

- 스웨덴 스톡홀름
- 노키아 옛 케이블공장을 문화예술거점으로

103

노동과 일자리

106

덴마크

- 완전고용 추구
  - 사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사민주의 이념에 따라 높은 복지와 완전 고용 추구
  - 실업률 1-2%
  - 관대한 실업수당
    - 70년대 무기한, 80년대 9년, '94년에 7년(3년의 활성화 기간 의무화)->96년 : 5년(3년) → 99년 : 4년(3년)
    - 평균 월 300만원 수준(기존 급여의 80%수준)
- 90년대 실업율 증가와 재정부담 초래
- 유연안정성모델 도입
  - 실업보험 체계의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를 주 내용
  - 기업주 : 쉬운 해고 허용으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확보
  - 실업자 :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거부 시 실업 수당의 지급을 중단
  - 성과 : 실업율 4-5% 감소, 고용율 증가

107

고용센터

- Roskilde(로스킬레) job center
  - Anne Haarlov, Manager
  - 150명 근무
  - 실직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1년내 85% 재취업
  - 실업자 중 50% 고용센터 활용
- 국가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 및 사용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형 단일 고용체계를 제공하는 것
- 주요 업무
  - 구직자와 기업 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
  - 각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아야 한다
  - 구직자는 마찬가지로 빠르게 일자리를 제공받아야
  - 언어교육, 전문 직업훈련, 구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112

고용센터 (2)

- 주대상
  - 실업자
  - 질병휴직자
  - 사회복귀자
  - 난민, 이민자
  - 연금수혜자
- 최근 개혁조치
  - 스텝 모델(Step Model)방식
    - 첫 단계에선 최장 6주간 실업자를 간단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 이후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에 보내 `실전 감각`을 익히게 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지자체로부터 임금 보조금을 받고 적당한 일자리에 단기 취업하게 된다.
- 분권화
  - 고용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 할 상당한 자유 허용

113

지방자치

118

후딩에 코뮨

- 스웨덴 스톡홀름
- Huddinge Commune
- 인구 10만 기초자치단체
- 집권당 : 보수우파연합(온건연합당 등 4당)
- 부시장 : 교사 출신 온건연합당 소속

119

Huddinge시 복지정책 소개

- 보육교육정책
  - 탁아소
    - 1-5세
    - 출산 1년 후 대부분 탁아소 맡김
    - 탁아소비 월20만원 수준-수입에 따라 차등
    - 탁아소 운영비는 코뮨에서 지원
    - 교사 : 1반당 2명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만5세 지나 입학
    - 3시간 수업, 나머지 시간 방과후활동
  - 초등학교
    - 초등3년까지 학교에서 방과후활동 지원
  - 고교진급
    - 대부분 코뮨 내 학교 진학
    - 원할 경우 다른 시 소재 학교로 진학- 2011년1학기부터 적용
  - 학생 수에 따라 학교 차등지원 : 15년전 보수당 집권 때 시작
  - 공사립교 구분없이 모든 학비 지원
  - 교육예산 : 코뮨 전체 예산의 55%

125

Huddinge시 복지정책 소개 (2)

- 노동정책
  - 고교 졸업 후 비진학,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
    - 취원지원
      - 직업교육 실시 -교통비, 식비 등 지급
      - 실습자리 알선
  - ADHD 등 장애인
    - 시청에서 고용한 후 사회진출 지원
- 노인
  - 양로원 대신 재가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시 직영과 민간기업 경쟁

126

Huddinge시 복지정책 소개 (3)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보호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고민
- 도서관 : 6개
- 체육클럽활동
- 세금
  - 코뮨에서 결정-19%
- 로빈후드프로그램
  - 부자코뮨에서 가난한 코뮨지원

127

우파의 집권이 스웨덴 복지모델의 후퇴를 의미하는가?

- 사민당은 복지시스템유지 위해 계속 증세만 해왔다
- 그 부작용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한 black job 많이 생김
- 온건당은 black job을 white job으로 전환시키고 오히려 세금을 내렸다
- 교사, 간호사의 경우 1개월 월급 해당액 감세
- "세금 낮춘다고 복지시스템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복지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체제를 바꾼 것"
- 병가수당 지급 부담 줄이기 위해 노동이 가능한 다른 분야 직업 권유 : “어깨가 안 좋으면 다리는 멀쩡하지 않느냐?”

128

스웨덴지방자치단체연합

129

역할

-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위한 연합체
- 전국 모든 코뮨과 란드스팅 가입
- 가입비 납부
  - 시민 1인당 4000원 수준
- 내부에 위원회 설치
- 선출직의원대상
  - 컨퍼런스, 워크샵, 강의 제공
- 목표
  - 더 나은 지방자치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 비전
  - 복지시스템과 서비스 발전

130

지역간, 지자체간 재정적 불균형 해소책

140

스웨덴

- 재정조정제도
  - 2005년1월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소득수준과 구조적 요인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형평화 실현 목적
  - 5분야
    - 세입균형조정
      - 전국평균세입수준 초과 지자체에게 부담금 부과->미달 지자체에 교부금 지급
      - 로빈후드제도
    - 비용균형조정
      - 고령자 많은 지자체, 농촌지역에 더 많은 비용발생에 따른 교부금 지급
    - 구조교부금
    - 이전교부금
    - 조정교부금 및 부담금

141

우리의 과제

142

한국 VS 북유럽 차이

- 인구가 적고 국토는 넓고 자원 풍부?
- 원래부터 부자나라
  - 천만에 변방의 보잘 것 없는 나라들
-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 스웨덴 20세기초 기근과 가난으로 인구10% 미국으로 이주
  - 핀란드는 90년대초 경제위기 겪음
  -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복지시스템을 후퇴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해서 위기 탈출
- 대화의 타협의 사회적 합의
  - 사민주의의 전통 중요
    - 노동조합의 지지
    - 높은 노조조직율
    - 기득권층의 낮은 저항
    - 사회적 합의 가능
  - 살쉐봐덴 협약(1938)

143

북유럽복지모델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아주 오래전 부터 도입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는 등 오래 세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모델
- 무상과 혜택에만 눈을 돌려서도 안되고 그것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정당하지 않다
- 어느 누구도 현재 모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지기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 아무 시련없이 순탄하게 온 것도 아니다

144

노르딕모델의 전제 조건

- 자유
- 평등
- 연대

- 사회적 합의
-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

145

보편복지 실현을 위하여

-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세금문제
- 사회자본(신뢰)

146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 도시계획
  - 도시에 대한 철학
  -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실행계획
- 도시재생
  -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서 탈피
- 대중교통
  - 버스
  - 자전거
  - 보행자 위주

147

연대와 상생의 사회를 위하여

- 파업에 대한 태도
- 정규직과 비정규직
- 대기업과 중소기업

148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사회적 합의
  - 필요성->재원->방식
  - 보편복지 범위
    - 교육
    - 보육
    - 의료
- 정확한 인식과 대안 마련 필요

149

의회에 대한 생각

- 스톡홀름 시의회의 작은 의자들
- 후딩에시 시의회 본회의장의 소박함
- 일과 끝나고 6시부터 열리는 의회
- 시장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의원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회
- 복지는 이념이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 민주주의는 시민들 속에서 자라난다
- 도의회 본회의장 풍경
  - 넓은 본회의장과 불편한 의자
  - 높은 의장석
  - 회의하는 곳이라면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150

아바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어요,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죠.
세상 무엇과도 잘 어울리도록 나를 도와 줄
동화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가질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해도
나는 천사를 믿어요.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선(善)함도
나는 천사를 믿어요.
알맞은 때가 오면
나는 강을 건널 거예요, 내겐 꿈이 있어요.
내겐 꿈이 있어요, 환상이죠.
힘든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 줄
내가 닿을 목적지는, 어둠 속에서도 힘을 내 한 발짝을 더 옮겨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죠.

151

주제별 선진사례1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한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환경복지위원회
고 영 규 의원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한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 기본목표

○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칙이며, 장애인 정책은 통합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업무체계

○ 스웨덴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정책에서부터 장애인 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결과까지 정부, 시민사회(비장애인), 장애인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 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사회연대성을 부여해 주는 시민사회의 환경은 장애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기까지 큰 역할을 해 왔고, 근래에는 장애인 조직체가 역(逆)으로 정부나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장애인 복지정책의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가지며, 중앙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계획과 프로그램의 보편성, 혜택분배에 관한 기본원칙과 법을 제정하고 재조정 한다.

○ 광역시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보건과 의료혜택, 일부 수송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주택, 문화와 여가활동, 어린이보호 등 직접적인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를 관할한다.

■ 장애인 고용제도

○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100% 출자한 기업을 설립하여 청소서비스, 재산관리서비스, 가정서비스, 보장구서비스 등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기업 하청의 포장, 가구생산, 자체브랜드의 재활보조도구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일반고용제도**

- 비할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스웨덴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 속에서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목적의 법률제도는 없다.
- 다양한 사회적 장애로 소득,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하여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유지, 일자리 재배치, 신규채용 및 이들에 대한 태도개선 방안검토 등의 일을 하는 조정그룹제도와 고용주에게 장애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제도가 있다.

○ **보호고용제도**

- 특별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계법은 없고, 보호고용도 일반고용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중 일반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호고용의 장을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

- 보호고용을 주관하는 국가행정기관은 노동시장청이며, 그 산하에 장애인들의 직업지도와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특별노동시장기관(AMI)이 설치되어 있다. 보호공장은 스웨덴 공동산업재단이, 그 밖의 보호고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경우 보호고용대상자가 원칙적으로 일반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한하고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지리적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실업자들에게 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있다.
- 스웨덴의 보호고용은 ① 보호공장, ② 보호공장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되는 재가고용, ③ 화이트칼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문서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서보관업무, ④ 블루칼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을 주로 하는 특별실업대책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전은영, 2008)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O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렵법(LSS)과 스웨덴 활동보조법(LASS)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 하는데 영향을 미친 법률이며, 독립생활운동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O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의 장애운동은 자기결정권이라는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O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재원은 사회보험청에서 편성된 재원을 사용하며, 소득기준이나 서비스 이용 상한선 규정은 없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도 없다.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판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박선권외 3, 2009)

■ 연수보고자 제언

O 장애인 문제와 노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약자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장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한 것이 비장애인 들에게도 편리하다는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본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하지 않고 사회의 주류와 통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며, 그 중에서도 고용차별은 장애의 생존권 유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스톡홀름 시청사 천정 벽화에서 보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고용촉진 관련 법률이 없다. 모든 시민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스웨덴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이었고 장애인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취급되어진 것 같다.

○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매년 30만 명이 뇌졸증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다.

○ 제대로 치료와 재교육을 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남은 인생을 방에 갇혀 보내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고, 능력껏 일하고,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 열악한 우리 현실에 비해 금번 연수국인 스웨덴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사회복지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 또한, 시민단체에 의해 각급 의회에 대한 옴브즈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의원과 의회에 대한 충실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 끝으로,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별 선진사례2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핀란드의 글로벌 경쟁력은 교육에서 온다.

환경복지위원회
문 면 호 의원

핀란드의 글로벌 경쟁력은 교육에서 온다

○ 핀란드는 싱가포르, 미국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함께 발전지속가능성 1위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 핀란드경제의 별인 노키아가 있는 나라, 1인당 휴대전화 이용률과 인터넷 사용률 1위의 국가, 핀란드는 디자인 선진국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헬싱키가 2012년 세계디자인 수도로 지정되는 등 공공 디자인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 2001년 UN 개발보고서에서는 핀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로 꼽기도 하였다.

○ 목재를 제외하면 천연자원도 전혀 없는 작고 멀리 떨어진 국가인 핀란드가 이렇게 신속하고 수익성 높은 방식으로 첨단 기술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유럽연합의 굴곡 많은 발전과 전 세계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긴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 이번 연수기간 중 들어본 핀란드 교육의 특징을 알아보고 안난딸로 예술센터를 방문하여 그 실마리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었다.

■ 핀란드 교육

○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별이 없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과정의 9년과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일명 9-3제로 되어있다. 다만 종합학교 9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진로 찾기 위한 1년간의 휴학을 채택하고 있다.

○ 핀란드어가 필수이며 스웨덴어도 필수로 지정되고 있으나 지금은 스웨덴어 보다도 영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핀란드인 중에는 4-5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 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나 핀란드의 교육수준은 세계 교육계에서 "핀란드 메서드"로 주목할 만큼 수준이 높다. 학생들은 경쟁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달성도에 평가되는 절대평가로 잘 알려져 있다.

○ 이것은 학력의 차이를 무시한 평등교육이 아니며, 고등학교는 종합학교 중등반 성적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핀란드 종합학교 교육의 주목할 만한 점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특별학급에 배정되거나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학력을 차별화 하여 저학력학생에 대한 개별 교육으로 뒤떨어진 학업성취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이 학교의 인형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 유네스코 규정에 따른 고등 교육기관(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과정)의 진학률은 세계 두 번째로 87%이다. 2004년도에 열린 OECD의 PISA(학업능력평가)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 등 교육열이 높은 국가가 유럽선진국을 제치고 학력 세계 제일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OECD 조사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PISA는 (1)독해 (2)수학능력 (3)과학문맹률이라는 세 분야에 대해서만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이다.

○ 핀란드 학교는 주 5일제를 적용하며, 교사는 대학졸업이 기본이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며, 의무교육이지만 유급제도가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다수 학교의 학비가 무료이다. 한 교실을 담당하는 교사가 1명이 아니라 3명이다.

■ 핀란드 예술교육

○ ANNATALO ARTS CENTRE (안난딸로 예술센터)
헬싱키의 아이들은 누구나 예술수업을 받는다는 5+2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센터 안난딸로는 예수의 할머니의 집이라는 뜻이다. 120년이나 오래된 곳으로 원래는 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지금의 아트센터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건물은 시 소유이며 시에서는 이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해 매년 150만 유로를 지급한다고 한다.

○ 여기서 하는 활동은 주로 방과후 예술에 관한 학습활동이 주된 것으로 현재 30개의 아트코스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도자기, 만화, 연극 등 온갖 예술의 영역이 포함된다. 이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는 각종 테크닉과 방법, 감수성을 훈련받는다.

○ 교사와 전문예술가 60여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 절반은 직업적 예술가이고 나머지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들 이라고 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에 따라 수업의 진행방법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술센터는 95% 헬싱키 시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전국에 11개의 아트센터가 있다.

○ 여기서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하도록 도움을 주고 지도교사의 인솔하에 헬싱키 시립예술원과 협력하여 공연하는 것을 구경하는 등 예술생활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 아트센터는 예술수업은 물론 다른 재능이 보여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 최근 설문조사에서 핀란드는 교육수준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핀란드 교육은 유명하다. 노키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던 것도 앞마당에 균형잡힌 인력풀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력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킬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핀란드가 디자인 강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 것도 어릴때 부터의 체계적인 예술 교육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핀란드 교육의 시사점

○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제학력조사인 PISA에서 핀란드 학생의 성적은 매번 세계 제일이다. 한국도 상위권에 속해 있어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한국과 핀란드는 매우 대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핀란드는 정규학교 수업만으로도 한국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과정은 매우 다른 셈이다.

○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교육도 영향을 받는 만큼, 어느 나라의 교육이 더 잘하고 있는지 따질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답답한 교육현실과 문제를 생각하면서 핀란드교육에서 한국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첫째, 핀란드는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형평성은 대조되는 교육정책 이념으로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위축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핀란드의 교육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재학교가 따로 없으며, 능력별 반 편성을 통한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믹시(miksi)교육이다.

○ 믹시는 '왜?' '어째서?'의 의미를 갖는 핀란드어이다. 즉 핀란드에서는 당연하다고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지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버릇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학생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도록 교육시킨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믹시를 주고받으면서, 핀란드 교육에서 강조하는 능력인 발상력, 논리력, 표현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 핀란드에서는 단순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하여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능력을 통하여 학생을 평가한다. 가르치는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통한 학교와 학생의 성적 비교는 없다. 학생의 석차는 성적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넷째, 핀란드 교육의 성공비결은 교사이다.

○ 핀란드의 초등 교사는 모두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도 상당수이다. 교사집단은 윤리적 책임감과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고 있다. 교사는 핀란드 청소년이 선호하는 희망직업 1위이며 의사나 변호사보다도 수입이 더 많다고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평가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다섯째, 학교/학급 규모가 작아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초등은 15명 (한국 26.7명), 중학교는 9.7명(한국 20.8명), 고등학교는 15.8명 (한국 15.9명)과 대조된다. 핀란드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내외이고 학년별 3개 학급정도의 작은 학교가 많아서 인간적인 배려가 가능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중학교는 15명으로 반 학생수를 줄여 줌으로써 사춘기의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섯째, 높은 교육비 투자이다.

○ 핀란드는 평생교육의 틀안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 예산의 14%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7%를 공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대학원까지가 무상교육이며,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음악영재학교와 같은 소수의 사립학교가 있지만, 정부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 이처럼 핀란드는 **국가정책, 교사, 학생, 교육제도, 사회문화의 측면**에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도 빨리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전북대 사범대학 박세훈 교수)

주제별 선진사례3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Ⅰ. 우리도 무상의료 가능하다!!
Ⅱ. 완전고용을 꿈꾸다!(스웨덴 노동정책을 통해)

환경복지위원회
이 현 주 의원

우리도 무상의료 가능하다!!
(스웨덴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북유럽 연수를 준비하면서 만난 대다수 지인들의 반응은 “사회복지 혜택이 그렇게 많으면 망하지 않아?”와 “스웨덴에 가서 살고 싶어”였다. 전자의 경우는 스웨덴의 사회복지가 “허구가 아닐까” 라는 의심이 깔려있고 후자의 경우는 “이상향”이라는 동경이 서려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짧은 기간동안 직접 접해본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탄탄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돈을 공으로 퍼주고도’ 스웨덴 경제는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복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과 집 마련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쓸데없이 인생과 재화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을 거두는데 어려움이 없고 사회복지를 하여도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느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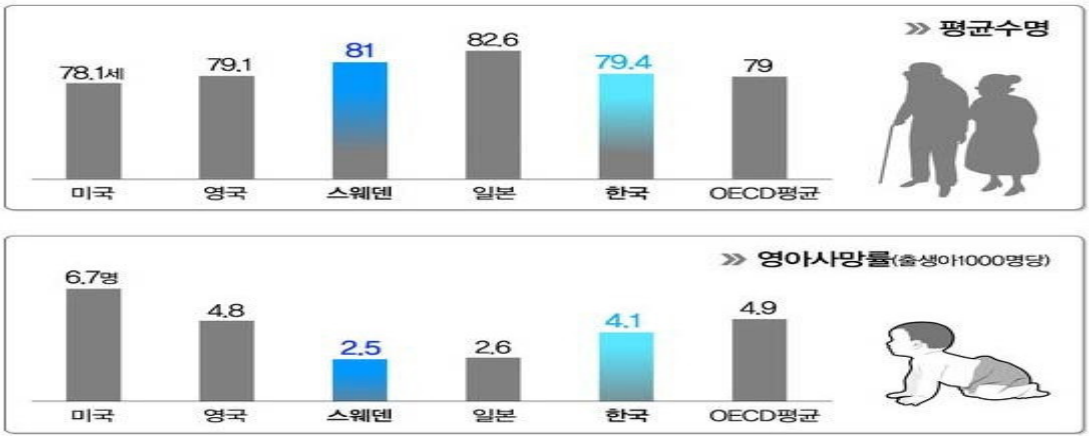
그러나 스웨덴이 이상사회는 아니다. 사회복지를 발전시킨 좋은 사회지만 문제점도 있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웨덴을 잘 배우는 길은 좋은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다.

먼저 스웨덴의 의료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무상의료의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주요국의 건강수준

주요국의 건강수준 (출처:OECD 건강자료 2009)



■ 암 환자를 통해본 스웨덴, 한국의 치료비

두 사람이 중병을 대하는 이 같은 다른 태도는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서로 다른 의료 제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스웨덴 박○씨 "골수이식·간이식 두번 대수술에 43만원(2,700크로나)"

- 스웨덴에 살고 있는 교민 박○씨(63)는 2006년 간암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암 말기로 간 이식수술만 받으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골수 이식까지 받아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이후 투병 생활을 통해 병마는 물론 시시때때로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다행히 박씨는 두 차례의 대수술을 잘 견뎌냈다. '살았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

● 한국 박○씨 "백혈병 치료 5000만원 이상"

- 한국에 살고 있는 박○씨(36)는 2004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어서 절망감이 엄습했다. 고된 항암치료

과정을 견디면서 그 역시 스웨덴의 박정식씨처럼 병마와 싸우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맞섰다. 그러나 박씨에게는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바로 돈 문제였다. 아내와 세 아이를 둔 가장으로 자신의 치료비에만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는 냉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치료비에 쓸 돈의 한계를 정해야 했다. '5000만원 이상을 치료비에 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씨에게 '살아야겠다'는 의미는 두 가지였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첫번째 의미였다면, 경제적으로 몰락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는 게 두번째 의미였다. 두 가지 터널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느꼈을 때 박씨는 비로소 '살았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 일반 개요

- 스웨덴의 의료보장의 근간은 국민건강보험제도로서 1955년부터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재원은 고용주의 부담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조달되고 피고용자는 부담하지 않음
- 스웨덴의 노동 재해보험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으며, 노동재해 보험의 적용대상은 스웨덴 거주의 모든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로 재원은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피고용자와 정부의 부담은 없음

○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

- 의료보장제도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치과진료의 경우 의과진료와는 달리 20세 미만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으로, 20세 이상은 치과보험제도(Dental care insurance)를 도입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됨
- 국가 보건서비스는 국민 보건복지위원회의 감독하에 21개 주정부(County council)〔landsting이라 하며, 우리의 광역자지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치과보험은 국민사회보험위원회 감독하에 사회보험사무소가 운영을 담당함

○ **재 원**

-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일반조세 수입에 의한 제도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County council)가 자체 조세권에 의해 조달된 조세 수입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
- 재정의 대부분은 지방세이고, 모든 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주 정부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세 부과권을 갖고 보건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수입의 85% 이상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일차의료, 입원진료, 응급의료, 약제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병원, 보건소, 민간 개업의 또는 민간 병원을 통해서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
-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치과진료의 경우 19세까지는 무료로 제공. 개업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의사협회간의 협약에 의해, 민간병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 환자의 의사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 **본인부담제도**

- 의료 이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마다 본인 부담률이 다르며 주별 본인부담률 차이는 최고 20%에 이르고 있으나, 1년에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은 중앙정부가 결정함.

- 의사진료의 경우 방문 당 100크로네에서 최고 140크로네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12개월 동안 총 900크로네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20세 미만은 본인 부담이 없음
- 약제비의 경우 환자는 첫 900크로네까지는 전액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약제비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1년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800크로네임
- 입원의 경우 24시간 당 80크로네만 환자가 부담. 어린이와 20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의료시설에서 한 경우에 한하여 치과치료가 무료로 제공됨

■ 조직구조와 관리

- 스웨덴 보건의료제도는 세 수준에서 조직되어 있음

○ 중앙정부 수준(Parliament)

- 주요 업무

① 의료정책의 틀을 부여하는 법령 등의 제정

② 예산배분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체의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고, 최저한의 보장을 달성

③ 보조금 등에 의한 정책유도를 수행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의 주요 책임은 보건의료제도가 본래 목적에 맡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임
-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NBW)는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중앙 자문 및 감독기구임. 모든 보건의료요원은 이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됨
- Medical Responsibility Board는 처벌기능(disciplinary measure)을 담당함

- Medical Products Agency는 약제의 질, 사용, 비용효과성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함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함
- National Corporation of Swedish Pharmacies는 모든 약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제의 전국적 유통을 담당함
-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NSIB)는 보험급여의 일관성과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
- Federation of County Councils는 county council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임

○ **Region 수준(County council) / 광역단체 단위**
- 일차의료에서 병원의료까지, 공중보건과 질병예방진료까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직접적인 책임을 담당
- 병원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사적의료시장에 대한 규제도 담당
- County councils는 대개 한 개의 병원과 여러 개의 일차 의료단위로 구성된 health care districts로 세분되며, 일차의료단위는 다시 primary health care districts로 세분됨

○ **Local 수준(Municipality) / 기초단체 단위**
- 290개의 Municipalities
- Municipalities는 아동간호, 학교보건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간호, 장기 정신질환자 간호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짐
- 공공 요양원과 가정간호서비스를 담당함

■ 보건의료 전달체계

○ 1차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 1차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보건소(local health centers)와 병원 외래를 통해 치료서비스와 예방서비스가 모두 제공하는데 환자는 진료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
-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1차 보건의료의 비중이 낮은데, 1차 진료의 46%가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정의는 일반 의료의 전문가이며 민간부문의 의료인이 공공재원을 받으려면 county council과 협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함
- 스웨덴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책임은 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 있으며,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공중보건의료 활동에 관하여 감독 및 감시의 특정 역할을 함
- 예방 및 공공 중심의 보건의료는 일차보건의료에 통합됨

○ 2·3차 의료

- 2·3차 의료서비스는 regional hospital, central county hospital, district county hospital을 통해 제공되며, 1990년대 초반 이후 환자는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 일반의의 진료의뢰 없이도 거주지역 관할 내의 전문의 진료 및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병원(county and regional hospitals)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 전국을 6개의 의료관구로 분할하여 각 관구에 최저 1개소(인구 90만명~190만명에 1개소), 고도로 특화된 의료를 공급하는 광역권 병원(regional hospital)이 있고, 다음에 각 주 수준에서 통상(인구 13만~30만) 1개의 주립중앙병원(Central County Hospitals)이 있고 그 산하에 주립지구병원(District County Hospitals)이 있음

- 총 입원환자는 1990년에 1000 병상 당 12.4에서 1997년 1,000 병상당 5.2로 감소하였으며 외래진료는 증가하였음. 이는 새로운 효과적인 치료방법의 등장과 1992년의 Adler 개혁(reform) 때문임
- 1980년대 오랜 대기시간(waiting time)으로 인해 민간의료 제공자가 성장하였으며, 1997년 대기시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county council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였음

■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정치구조적 요인

-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 갈등과 지역 갈등의 요소가 미약하여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정당 정치가 전개되었으며,
- 민족의 동질성이 높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여 정당 정치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요 정당들의 이념은 1920년대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
- 또한 1932년 이후 약 9년을 제외하고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정치적 안정 도모과 정책의 지속성 보장 및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체계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책안에 대해 이익집단과 단체들이 참여한 1-2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기제로 활용

○ 사회경제적 요인

- 조세를 바탕으로 한 의료제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을 충분히 걷는 일이고, 이를 위해 완전 고용은 필수적인데 90년대 초까지 약 2%정도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기 불황과 관련하여 높아진 실업률은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사회문화적 요인**

-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 중에서 농민인구의 비중이 큰 편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 주의적 이념과 친화력을 유지하는 바탕이 됨
- 스웨덴 사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러곰(lagom)'과 '얀텔러겐(Jantelagen)' 정신

☞ **러곰(lagom) :** '적당히'란 뜻으로 바이킹 시대의 풍습에서 유래, 바이킹들이 큰 사발을 술에 담아 돌려마셨는데 너무 적게 마시면 아쉽고 너무 많이 마시면 다른사람들이 못마시기 때문에 각자 적당히 마셔야 함을 알고 있었음

☞ **얀텔러겐(Jantelagen) :** '얀테의 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법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추켜세우지 말라고 충고함

○ **보건의료체계 내의 요인**

- 철저한 분권화로 주의회(County council)와 290개의 자치시(municipality)는 주민에 대해 독점적인 조세징수의 권리를 갖고 이를 통해 마련된 지방세 재원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함
- 각 주의회마다 주민들의 의료 요구를 반영하고 주의 상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함
-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자치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의료적 처치 이후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등을 연결선상에서 책임지고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
- 또한 주의회와 자치시가 보건의료재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국가수준에서 결정되는 중앙집권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부터 국가보건서비스체계(NHS)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체계 내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함. 긴 대기시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영화의 도입
-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민영화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기업적 행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 조직 구성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음
- 스웨덴의 보건의료기관의 약 40%는 민간에 의해 국가 예산을 받아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에 대해 국가에 의해 관리 감독됨. 사업자가 바뀌어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함
- 대기시간 보증제와 가정의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비 지불체계를 급성질환(short-term care)는 포괄적 행위수가제를, 성과산출이 힘든 정신질환, 노인질환, 응급서비스는 총액예산의 형태로, 일부에서 일차보건의료에 인두제를 도입하여 탄력적인 비용지불체계를 운영함

■ 스웨덴 보건의료의 3가지 기본원칙

○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Human dignity)**

○ **비용대비 효과의 원칙(Cost-effectiveness)**

○ **필요와 연대의 원칙(Need and Solidarity)**

⇒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면서도(연대의 원칙)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은 비용 부담으로 누구나 치료를 동등하게 받는다.(필요의 원칙)

⇒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연대의 실질적인 모습은 다섯가지 형태의 상호지원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① 건강한 사람에게서 병든 사람에게로
② 부유한 사람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③ 젊은 사람에게서 노인에게로
④ 개인에게서 가족에게로
⑤ 남성에게서 여성에게로

■ 국민건강 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도 건강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권을 비교적 잘 규정하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도 그러 하였듯이, 자유권과 참정권에 이어 시민권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복지국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한 가운데 '보편주의 원칙'이 있다.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운영에서 보편주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하나의 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국영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s)나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이나 시장주의 민간의료보험(PHI, Private Health Insurance)에 비해 '탈상품화'와 '탈계층화'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전략도 보편주의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별 구분을 넘어서서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제도적으로 복지와 사회권을 보장받는 방식을 요구하고 성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국민건강보험(NHI)은 국영의료제도 방식이 취하고 있는 공적 단일보험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고, 진료시점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하였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이 더 잘 팔리는 왜곡된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의료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각자 알아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함으로써 스스로 병원비 불안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 목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발생하는 전체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병원비 불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정당, 단체들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어 보편적 복지의 시스템으로 "무상의료" 실현을 앞당기리라 기대한다.

■ 현지방문

❑ 나까 노인전문병원 가정방문간호사업

가정방문간호사로 30~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노인수발 도우미가 할 수 없는 의학적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독, 소변줄 교환, 약물투여, 처치 등 의학적 처치들을 한다.

간호사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밤에도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호출시에는 출동하기도 한다.

이들의 서비스 대상은 연령의 제한이 없고 집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치료한다.

이 병원은 원래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영하였으나 2001년 민영화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비용은 광역자치단체 부담이 원칙이고 서비스 대상자는 직영이나 민영화에 대한 차이를 전혀 못 느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완전고용을 꿈꾸다!
(스웨덴 노동정책을 통해)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사회정책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에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투표권의 확대로 인하여 점차 노동자들의 정치력이 강화되고 사민당의 의회진출이 증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당과 사민당이 연합하여 사회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의 사민당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유당의 연금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형성은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이며, 케인즈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완전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스웨덴 사회를 안락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연속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산업구조, 고용구조, 행정조직 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는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국가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게 되었다.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정치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민당은 노동계급에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복지수혜자가 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민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1913년 연금보험제도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1932년 사민당과 농민당이 연합함으로써 복지대상자가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원리가 지속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기의 복지 수혜자는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50년대 말부터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정이 붕괴된 이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증대함에 따라 임금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이것은 스웨덴 복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계급 정치적 모델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강력한 노조와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 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눠지는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중계(일자리연결), 학습복지체계, 고용창출, 노동시장 조정정책은 물론이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한다.

스웨덴은 연대임금정책과 긴축재정정책은 한계기업의 도산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를 발생시켰다.(조영철 2007:202).

스웨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성장산업으로의 이동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함과 동시에 연대임금정책에서 최저임금 한계선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적은 완전 고용과 평등, 인플레 억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일자리 창출을 전적으로 맡기기에 힘들 때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고용한다.

이외에도 시장에서 창출하지 않는 사회적 일자리(공공의료,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 등) 창출을 한다. 여기서 연대임금정책이 결합하면서 임금 안정은 물론이며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 기능도 가능했다.

■ 고용보험

○ 대상자

- **첫째,** 실직 전 12개월이상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금고에 가입했어야 한다.
- **둘째,** 실직 전 12개월중 6개월 동안 매월 80시간 이상 일했거나, 연속된 6개월 내에 480시간 이상, 그 6개월 동안 5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 **셋째,** 하루에 3시간이상 일주일에 17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꼬뮌)의 고용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사무소와 상담하여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고용사무소에서 알선해준 적절한 일자리를 받아 들이도록 준비해야 한다.

○ 전달체계

- 고용보험은 고용부산하의 독립기관인 스웨덴 실업보험청에서 총괄한다. 스웨덴 실업보험청은 실업보험금고와 노동시장청이

실업보험규정에 맞게 업무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며 실업보험금고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럽연합 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 중앙의 노동시장청은 노동시장정책 및 지침의 결정,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에 대한 지원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청은 중앙의 노동시장정책 범위 내에서 주정부의 노동, 경제환경에 맞게 노동시장정책을 조정하고 직업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는 직업상담, 직업알선 등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한다.

○ 급 여

- 고용보험의 급여는 소극적 노동정책인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직업상단, 작업알선, 직업훈련으로 나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실직 전 1년 이상 실업금고에 가입, 실직 전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최대 30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300일은 근무하는 일수만(주5일) 계산한 것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넘는다.
- 한편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나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 소득비례 실업급여는 실직전 평균소득의 80%이며 하루에 680크로나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초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은 하루에 320크로나의 기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20세가 될 때부터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실업금고에 의해 지불된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모든 실직자에게 이용의 기회가 보장된다. 고용사무소는 구직자, 구인자연결, 직업훈련,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훈련, 직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의 대부분은 87%가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별 선진사례4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한다.

환경복지위원회
유 창 희 의원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한다.

성년을 맞이한 지방의회. 20년을 지나온 지방의회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었으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집행기관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그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제고된 것도 지방의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기관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정은 지방 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여러 상황들로 인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유급제 도입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전문위원 제도 도입, 연간회기 일수 조정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

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앙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던 차에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는 선진국을 들러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난 6월 22일부터 10여 일 간 유럽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스웨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지방의회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룰모델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스 웨 덴】





■ 일반현황

○ 공식명칭 : 스웨덴왕국(Kingdom of Sweden)
○ 인　　구 : 9,150,000
○ 면　　적 : 450,295㎢
○ 수　　도 : 스톡홀름
○ 정체·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단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왕/총리
○ 공식 언어 : 스웨덴어
○ 독립년월일 : 11세기경
○ 화폐단위 : 스웨덴크로나(Swedish krona/SKr)
○ 국가(國歌) : Du gamla, du fria, du fjallhoga nord
("Thou ancient, thou free, thou mountainous north")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한국과는 1959년 3월 공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1960년 10월 대사급으로 승격되었다.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인 6·25전쟁 때 우방국으로 참전해 야전병원선을 파견했으며, 1958년에는 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요재원을 공동 투자해 전상병을 비롯한 환자진료와 의료요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메디칼 센터(지금의 국립의료원)를 설립했다. 1963년 주스웨덴 한국 상주대사관이, 1973년 주 한국 스웨덴상주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양국은 1967년 4월 무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 이래 점차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조직

○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코뮌과 랜드스팅에 대해 공통이다. 코뮌과 랜드스팅은 하나의 의결기관, 즉 코뮌에 있어서는 코뮌(기초) 의회, 랜드스팅에 있어서는 랜드스팅(광역) 의회를 가져야 한다. 또 코뮌 및 랜드스팅 의회는 집행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의회는 집행위원회 외에 특별법에 입각한 사명의 수행 및 그 외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1991년 전에는 특별법에 입각한 위원회(환경 및 건강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지정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실시되었던 프리코뮌의 실험을 거쳐 1991년 지방지치법 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 어떠한 위원회를 둘 것인가의 결정은 각 자치단체에 위임되었다.

○ 프리코뮌의 실험에 의해 몇 개의 코뮌에 도입된, 코뮌 안의 더 작은 지역구분에 대한 포괄적 임무를 갖는 [구역위원회]나 특정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진 것은 지방자치법 제3장 제4조에 규정된 아래의 원리에 있다.

- 의회는 위원회의 소관분야 및 위원회 상호 관계에 대해 규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 의회는 이하의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한 위원회가 코뮌의 전 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사업을 담당한다.
- 한 위원회가 하나 이상의 시설을 담당한다.
-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종속한다.

○ 자치단체의 조직구성에 대한 재량 범위는 1991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사무사업 자체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일반적 권한에 입각한 사업을 소관하는 임의 위원회와 특별법에 규정된 각 사업을 소관하는 몇 가지 형태의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 프리코뮌의 실험기간을 통해 1992년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직 개혁이 진행되어져 구역위원회제도가 도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드시 구역위원회제도가 전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채용되어 온 분야별위원회 조직으로 돌아가는 곳도 꽤 있었다. 그리고 구역위원회와 기능별위원회를 병용하는 조직을 취하는 코뮌도 많으며,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개혁과정을 거쳐 각 자치단체의 위원회구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현재 스웨덴 자치단체에 의해 실제로 채용되고 있는 조직 형태로는 아래의 3가지와 복합형이 있다.

- 분야별 조직
- 구역별 조직
- 기능별 조직

1. 분야별 조직

○ 전통적으로 채용되어온 모델로 1991년 이전에는 프리코뮌에 참가하고 있던 파이롯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체의 코뮌에서 이 모델을 채용했다. 자치단체는 몇몇 분야에 관해서 특별법에 의해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 시 되었다.

○ 현재에도 분야별 위원회를 가진 자치단체가 많지만 인구구성과 업무 목표에 따라, 특별히 사회 서비스에 관해서는 더 세분화한 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많다.(고령자 케어, 장애자 케어 등) 의원은 특정 사업분야를 소관하는 각각의 위원회에 분배되어 그 사업분야에 관해서 사무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한다.

2. 구역별 조직

○ 80년대의 프리코뮌 실험에 있어, 이 모델을 채용한 코뮌이 많았다. 자치단체를 그 구역 내에 더 작은 지리적 단위로 구분해, 각 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 1990년대 후반, 역으로 그 조직구성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사무사업의 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 증가를 들 수

있다. 스톡홀름, 마르모, 예테보리의 대도시 코뮌에서는 이 모델이 채용되었다. 스톡홀름, 예테보리에서는 병용적으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으나, 마르모에서는 현재 분야별 위원회 조직가 되었다.

3. 기능별 조직

○ 90년대 이후에 증가 경향을 보였던 모델이다. 자치단체의 비용 감소의 명제를 추구해서 80년대 말부터 실험적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에서는 1988년에 강제 경쟁 입찰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제도는 경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의 자치단체 사업 실시에 대해 외부 참가자도 대상으로 한 입찰수속을 의무로 하였다. 기능별 조직의 모델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업 실시에 있어 자치단체의 조직을 [발주자]측과 실시를 위한 전문가인 [청탁자]측으로 나눠 의회에 있는 [발주자] 위원회가 자치단체 내부의 [청탁자] 및 외부조직에 의한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 서비스를 발주하는 모델이다. 발주자인 위원회는 낙찰자에 대해 각 사업 실시를 1년 내지 몇 년을 그 기간으로 해서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

■ 지방자치단체연합

SverigesKommunerochLandsting



○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스웨덴 전역의 290개의 구와 20여개의 특별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290개의 자치구와 20여개의 특별자치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 각 종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지역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기도 한다.

○ 이 연합단체는 각 지역구가 자립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때로는 문제제기도 하여 여론조성을 하기도 한다.

○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종사자는 시·도의원 약 4만 5천여 명의 활동을 지원, 보좌해 주고 근무자가 약 43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다.

○ 이 연합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290개의 구와 20개의 특별 자치구가 회원사로 등록하여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 운영수익은 4천 2백만 유로에 달한다.

○ 정부의 보조금이 전혀 없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기에 전문가 집단 자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정책과 제도 개발, 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대변해 내고 있다.

■ 연수를 마치며

○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현실을 보면,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장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 협의회 등만 구성되어 있다. 16개 시·도에는 각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 또한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운영 시 예산의 취약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담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 또한 의장단이 전·하반기에 바뀌게 되면서 담당하던 전문위원들이 같이 바뀌게 되므로 업무의 영속성이 없고 의장단 또한 단순한 기능밖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므로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싸움을 통해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싸움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지방분권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투쟁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체 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입법권 강화, 지방 세수 확충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앞서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연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도 전국 지방의회가 모두 가입하는 강력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물론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 마련 또한 각각의 지방의회가 부담해야하며, 전문가 집단이 임기에 구속되지 않는 영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강력한 추진단체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별 선진사례5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국가의 친환경 정책 모델

환경복지위원회
정 진 숙 의원

【 북유럽 국가(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생태-환경 】

처음 가본 유럽은 듣던 바 대로 엄숙하고 약간은 딱딱했다.
몇 백년전에 지은 건물에 지금도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건축 당시의 년도와 우리 조상님들의 삶이 넌지시 비교되어 여러번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나름 국가마다 역사적인 시련도 있었고, 자연 환경도 썩 좋지 않은 상황 이었다.
물과 호수가 많아서 친 환경적인 나라 같지만 온통 나라가 바위가 많은 것이 개발에 악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벨 같은 학자가 탄생 되지 않았나 싶다.

일년 중 대부분이 춥고 여름 잠깐만 따뜻한 그들은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었다. 물론 단열이 염려가 되긴 하지만 최대한 일조량을 활용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꽃들이 만발한 계절이어서 그런지 형형색색 갖가지 꽃들을 정말로 실컷 볼 수 있어서 행복 했다. 글로벌 시대라는 실감을 꽃을 포함한 식물들을 보면서 했다. 언제부턴가 못 보던 꽃들이 자연스레 화원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 들어 왔는데, 가서 보니 그 동네에 쫙 깔려 있었다. 우리 동네 에서만 인기인줄 알았던 소나무, 은사시나무, 떡갈나무 등등이 그 동네에서도 주름 잡고 있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여름 잠깐 보는 화초를 위해서 잘 만들어진 거름흙을 쓰는 덕에 화분의 화초들이 충분할 만큼 자기 색을 뽐내고 있었다.

특이 했던 것 중 하나가 그렇게 많은 호수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궁금해 물으니, 그 나라들은 낚시도 면허제도 란다. 수시로 면허자들에게 교육은 필수일뿐더러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먹지 않고 돌려 주는게 상식으로 통하고 있었다. 갑자기 바다 낚시를 가서 우럭을 낚았다고 환호 하면서 배 안에서 날로 먹었던 즐거웠던 기억이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렸다.

작년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구제역의 가장 큰 원인이 밀식 사육에 있다. 그 동네는 축산의 밀도도 엄격 하게 정해져 있어 가축도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싶다. 축산의 밀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이다.

목재를 소재로 많이 활용하고 오래 보존 되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 목재가 흔할 만큼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다 날씨가 건조하니 썩어서 상할 일이 없었다. 어딜 가나 물기가 없이 바싹 말라 있고, 고실고실 했다. 덕분에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사정없이 땅겨서 스킨을 얼굴에 부어야 했다.

세 나라 모두 산업화 이후에 심각한 공해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며 지금은 명실상부한 친환경 국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스웨덴 작은 도시 함마르비의 미래형 신도시 모델 사례, 덴마크 친환경 풍력 에너지 사례를 들어 볼까한다.

【 스웨덴의 성공적 생태도시 ‘함마르비’ 】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인구 25,000명의 작은 도시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호수주변이 심각한 오염 사태에 이르렀다.

함마르비는 2004년 올림픽선수촌 건설을 위해 계획되었으나 올림픽 유치가 무산된 뒤, 주거단지로 바꾸어 1998년 국가차원의 친환경 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친화적 주거전용 타운으로 조성했다.
수변 공간과 녹지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경관 확보는 물론 자체 상하수도 관리 시설을 만들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주택은 모두 태양광 집열판을 갖추고 모든 주택이 5층 이하로 자연친화적이고, 특히 조망을 위해 발코니의 구조가 주택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3km의 수변도로는 산책, 조깅을 즐길 수 있고 이 도시는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트램(전동차)이 시가지를 선회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였다.

함마르비는 도시 기능을 통합 관리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진공청소기와 같은 원리로 쓰레기를 중앙 수집소에서 수집하여 재처리하고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함마르비시의 주택 난방, 발전용 연료로 사용한다.
바이오 가스로는 시민들이 움직이는 대중교통의 연료로 쓰고 있다.
함마르비는 에너지 리싸이클링을 통해 철저히 자원화하고 있다.
즉, 쓰레기가 곧 자원이 되는 셈이다.

함마르비는 이 같은 가소성 쓰레기 처리와 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도시 난방의 70%를 해결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를 30~40% 낮춘 미래형 녹색 도시로서 향후 목표는 에너지 소비를 50%까지 낮추는데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주택은 높이, 마감재, 색상까지 규제한다.〉



〈수변도로〉



〈생태계를 보건한 호수〉



〈전기자동차 충전소〉

【 덴마크의 친환경적인 '풍력' 에너지개발 】

덴마크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서 오래전부터 앞서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이후 석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민, 그 해답을 풍력에서 찾았다.

덴마크는 지형 특성상 연중 바람이 많아서 세계에서도 가장 먼저 풍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일반 가정에서도 풍력 발전을 통해 자체적 전기를 조달하고 남은 것은 수출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덴마크는 북유럽 에너지 협력을 주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를 포함 다섯 개 나라로 이루어진 에너지 협력체는 전기 발전량 부족의 상황에서 “위기 공동 대처, 상호 공동 이익에 관한 협동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설비 통일”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에너지 자체 생산이 이미 생활화가 되어 있는 듯 했다. 도시 근교 어디서나 건물 근처에 풍력을 생산하는 대형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 환경을 중시하는 자전거 정책 】

덴마크도 스웨덴과 마찬 가지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 보다 못지않게 에너지 소비 감소에 노력 하는 나라다.

자전거를 대도시 공통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 전철과 자전거 이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시스템 등등..



〈핀란드 자전거도로〉



〈스웨덴 자전거도로〉

【 덴마크 코펜하겐 자전거 투어 】

우리 연수팀은 막간을 이용해서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자전거 투어를 했다. 본인은 자전거가 몸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시도를 못 했지만 모두들 행복해 하는 표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광경은 유모차를 끌고 자전거를 타는 젊은 아빠들의 모습이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자전거 투어〉

이것 저것 몸으로 느끼며 함께 고생한 열흘간의 연수였다.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너무 솔직한 표현일까?

별 첨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회

1. 연수 개요
2. 연수국 일반현황

1. 연수개요

Ⅰ. 목 적

○ 교육과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에 이르는 전반적인 복지를 주제로 북유럽 3개국(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선진모범사례 현장을 탐방하여

○ 지역을 새롭게 상상하고 지역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Ⅱ. 현 황

○ 연 수 자 : 10명

-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7, 공무원 3

○ 연수지역 : 북유럽 3개국(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 연수기간 : 2011. 6. 22.(수) ~ 7. 2.(토) **[9박 11일]**

Ⅲ. 내 용

○ 방문국 지역정치인과의 지방자치에 대한 간담회 실시

○ 복지시설인 자치구 실버타운 방문 국내 시설과 비교견학

○ 방문국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원칙과 실행과정 벤치마킹

○ 기타 친환경·복지정책의 우수사례 및 고용정책 현황파악 등

Ⅳ.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비 고
2011. 6. 22 (수)	전 주	헬싱키		○ 인천 국제공항 출발 (10:25) ○ 헬싱키 도착, 입국수속 등	
6. 23 (목)	헬싱키	헬싱키	안난딸로예술센터 시립도서관 케이블 팩토리	○ 핀란드 예술교육기관 방문 ○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운영 및 대출 시스템 파악 ○ 옛 공장지대를 문화예술복합 시설로 개조한 사례 방문	
6. 24 (금)	헬싱키	스톡홀름	도시계획전시관 아라비아란따	○ 헬싱키 도시관리계획 부서 방문 ○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원칙과 건축물의 디자인 연계과정 이해	
6. 25 (토)	스톡홀름	스톡홀름	함마르비 감라스탄	○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생태 친화적인 도시사례 시찰 ○ 구시가지 정비사례 견학	
6. 26 (일)	스톡홀름	스톡홀름	웁살라대학	○ 웁살라 대학 도서관 관람	
6. 27 (월)	스톡홀름	스톡홀름	후딩시청(코뮌) 지방자치단체연합	○ 지역정치인과 간담회 개최 - 후딩시장, 부시장 ○ 스웨덴 지방자치제도 이해	
6. 28 (화)	스톡홀름	스톡홀름	나카시 노인병원	○ 스웨덴의 보편적 무상의료 및 가정방문서비스 이해	
6. 29 (수)	스톡홀름	코펜하겐	코펜하겐시청	○ 유럽의 공공기관 시설 견학	
6. 30 (목)	코펜하겐	코펜하겐	노인복지시설 로스킬드Job센터 코펜하겐중앙역	○ 덴마크 노인복지시설 참관 ○ 덴마크의 고용정책 이해 ○ 코펜하겐 자전거정책 체험	
7. 1 (금)	코펜하겐	헬싱키		○ 이동(코펜하겐 ⇒ 헬싱키 ⇒ 인천)	
7. 2 (토)	인 천	전 주		○ 인천 국제공항 도착 (08:30)	

Ⅴ.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영문)	비 고
도 의 회 환경복지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성 주 (KIM SUNG JU)	
	간 사	김 택 성 (KIM TAK SUNG)	
	위 원	고 영 규 (GO YOUNG GYU)	
	위 원	문 면 호 (MOON MUYN HO)	
	위 원	이 현 주 (LEE HYUN JU)	
	위 원	유 창 희 (YOU CHANG HEE)	
	위 원	정 진 숙 (JEONG JIN SUK)	
환 경 복 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별정 4급)	최 동 명 (CHOI DONG MYEONG)	
	직 원 (보건 6급)	노 창 환 (NOH CHANG HWAN)	
	직 원 (행정 7급)	신 동 호 (SHIN DONG HO)	

2. 연수국 일반현황

Ⅰ. 핀란드 (FINLAND)

○ 핀란드는 북쪽으로는 북극권의 혹독한 자연이, 남쪽으로는 발트 해와 보트니아 만이 접한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어져 다양한 풍경을 자랑함.

○ 오랜 세월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까닭에 지금도 당시의 영향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토의 서부, 특히 해안 지방에서는 스웨덴어가 통용되며 도시나 거리의 이름도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이중 표기된 곳이 많음.

○ 러시아의 영향으로 작은 마을에서도 정교회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음.

♣ 수도 : 헬싱키 (HELSINKI)	♣ 면적 : 338,145Km^2
♣ 인구 : 약 531만명	♣ 종교 : 복음 루터파 (87%)
♣ 정체 : 공화제	♣ 통화 : 유로화 (EURO)
♣ 언어 : 핀란드어 90%, 스웨덴어 7%	

【 헬싱키 (HELSINKI) 】

'발트해의 아가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로 아름다운 거리와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대형 선박들이 드나드는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특히 6~8월은 백야가 계속됨..

Ⅱ. 스웨덴 (SWEDEN)

○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노르웨이와 양분해 남동부를 차지하고 수도는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스톡홀름이다. 지리적으로 북동쪽은 핀란드와, 서쪽은 노르웨이와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 독일과 마주보고 있다.

❍ 스웨덴인은 북부 게르만인의 일족인 고트인과 스비아인이 스웨덴에 정착해 융합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바이킹 활동이 왕성했던 9세기경부터다. 하지만 11세기에 바이킹 활동이 막을 내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룩했다. 이후 스웨덴은 유럽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한때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지배하는 등 스칸디나비아의 강국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 현재는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같은 북유럽 국가들끼리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스웨덴은 경제력과 1인당 국민 수준과 세계에서 수준 급이다.

❍ 특히 사회 보장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삼림, 철광석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여름에는 일조 시간이 24시간으로 백야도 만끽 할 수 있다. 또 수도인 스톡홀름에서는 세계인들의 꿈인 노벨상 수상식이 열린다.

♣ 수도 : 스톡홀름(Stockholm)	♣ 면적 : 45만Km2
♣ 인구 : 915만명	♣ 종교 : 복음 루터교와 국교회
♣ 정체 : 입헌 군주제	♣ 통화 : SEK (크로네)
♣ 언어 : 스웨덴어	

【 스톡홀름 (STOCKHOLMS)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중의 하나로 물위에 있기 때문에 '물위의 아름다움'이란 이름이 늘 따라 다닌다. 스웨덴의 관문인 스톡홀름은 발틱해와 마라렌 호수가 만나는 곳에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수도 중의 하나로 문위에 세워진 매혹적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도시 한가운데서도 수영하고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2만4천개나 되는 섬이 있다. 도시 주변은 역사, 성, 아름다운 마을로 가득하다.

Ⅲ. 덴마크 (DENMARK)

❍ 유럽 대륙 중, 북부에 위치한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3개의 주요 섬, 480여 개의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졌다.

❍ 덴마크의 역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는 약 1만 년 전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9~11세기, 노르만인의 해외진출(바이킹의 활동)이 활발하던 때였다. 9세기경, 통일 국가를 가장 먼저 이룬 덴마크 왕이 사실상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17세기 이 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덴마크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쇠퇴, 1849년에는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국가가 되었다.

❍ 현재의 국가 원수는 1972년에 왕위를 계승한 여왕 마르그레테 2세로, 국왕은 형식적인 행정권, 수상 임명권 등을 갖는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가 사는 나라 덴마크, 유럽에서 평등 의식이 스며들어 있다.

❍ 현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낙농국가로 치즈, 버터, 쇠고기 등을 수출하고 있다.

♣ 수도 : 코펜하겐(KOPENHAGEN)	♣ 면적 : 43,094 ㎢ (한반도의1/5)
♣ 인구 : 555만 명	♣ 종교 : 복음 루터교
♣ 정체 : 입헌 군주제	♣ 통화 : DKK(크로네)
♣ 언어 : 덴마크어	

【 코펜하겐 (COPENHAGEN) 】

상인의 항구라는 뜻을 지닌 코펜하겐은 1,36만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덴마크의 수도이다. 많은 공원과 푸르스름하게 산화된 중세의 구리 지붕으로 흔히 'GREEN CITY'불린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유명하며 궁전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인 건물, 미술관 등이 많다. 코펜하겐은 번화가, 식당가, 호텔가, 학생가, 서점가, 상점가, 주택가 등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 거리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세의 거리엔 차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